

# 시도 때도 없는 압수수색 글로벌 망신넘어 신용하락

## 흔들리는 검찰권위 (下) 무자비 압수수색

국내 굴지 대기업 중역인 A모는 지난해 경험한 일을 아직 잊지 못한다. 아침 7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자택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이 온 집안을 샅샅이 들춰낸 것이다. 이런 광경은 모시던 부모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자녀에게도 충격을 줬다. 당시 부인은 압수수색에서 받은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당사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무자비하게 할수록 성과가 높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입는 충격에 대한 배려나 인권존중은 온데간데 없다. 당시 중역은 “아이들 등교한 후에 해도 될 터인데... 이들은 아직도 맘 아파한다”고 회상한다.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후 삼성, 롯데, LG, 현대차, 효성 등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한 차례 이상 압

수색했다. 2월 26일 검찰은 다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 후인 4월 12일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4월 18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5월 15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 본사에 위치한 콜센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고 해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적법절차에 의거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역시 필요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잦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 업무까지 힘들어진다며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삼성 롯데 등 대기업 수난시대 한진은 10곳서 11차례나 털어 檢, 과잉의욕에 피해자 자살도

수색을 당했다. 큰 박스 하나씩 들고 오는 수사관들의 보도사진이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해당 기업은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영문을 모르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업 직원이 겪는 마음고생도 적지 않다. 태산이 올라는데 겨우 쥐 한마리 나타난다는 말처럼 작은 사건 하나로 온 기업을 전부 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목표를 한정한다면 좋겠는데,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벌써 몇번이나 털릴 털어간지 모르겠다는 불평이 나온다. 심지어 “이런 일 당하면 무슨 기업할 맛 나겠냐”는 불멘 소리도 적지 않다. ‘적폐청산’이란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본연의 업무까지 힘들게 하는 잦은 압수수색에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월 18일에는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남기업 본사와 이 회사 회장인 고성완 전 새누리당 의원 자택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자원의료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명분이다.

대표 일가가 관련된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검찰을 포함해 정부 기관 10여곳의 압수수색 11번이 이뤄졌다. 투입인원만 240여 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삼성그룹도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모두 8건의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첫 압수수색은 지난 2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건으로 이뤄졌고, 검찰은 삼성전자 서초사업장과 수원사업장, 우면동 삼성서울R&D 센터 등 3개소를 압

수색했다. 2월 26일 검찰은 다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 후인 4월 12일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4월 18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5월 15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 본사에 위치한 콜센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고 해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적법절차에 의거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역시 필요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잦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 업무까지 힘들어진다며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기업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문서는 물론이고 어떤 때는 전화기까지 가져간다”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수사를 방해하는 거냐는 위협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의 과잉의욕은 비극도 부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와 관련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대기중인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고위직 검사로서도 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은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압수수색 후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로 내사종결이 되어도 피의자와 피고인은 사과 한 마디 들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검찰이 법에 적힌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 필요적보석이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공정위의 간부들이 퇴직 후 불법 재취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신세계페이먼트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트 사무실 앞에는 보안요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난민 비아냥·혐오 우려수준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을

## 혐오민국 길을 묻다 (上) 난민 갈등 해소해야

한국사회가 혐오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 사태를 두고 인터넷은 공론장 기능보다 혐오감을 재확인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선 자기안정과 경쟁 추구 본능이 위협받을 경우 혐오 표현이 발현될 수 있어,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은 예멘 난민을 향한 불안감과 혐오 정서로 도배되어 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가 등록됐다. 청원인은 2002년 제주도가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치안 문제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4일 현재 청원 동참인원은 60만 명을 넘어섰다. 치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이 청원의 댓글에는, 청원자의 의도를 벗어난 비아냥과 혐오 표현이 줄을 이었다. 댓글 중에는 “난민 찬성하는 분들 말로만 인권 외치지 말고 한명씩 데리고 살으라” “우리는 북한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무슬림까지는 아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만 500명인데 진짜 난민이냐. 당장 내보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 ◆난민에 ‘기회주의자’ 낙인

난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같은달 19일 블로그를 통해 “난민들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며,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립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제주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난처 블로그 댓글에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 기회주의자들” “당신들 같은 인권팔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있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적개심과는

달리, 외국인 범죄율은 물론 이슬람교를 가진 범죄자의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다. 대검찰청의 ‘2017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범죄자 202만196명 가운데 외국인인 4만3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194만8966명 중 3만7928명으로 1.9%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종교에서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했다. 범죄자 종교는 2016년 불교(8.6%), 기

“혐오는 상대와 나를 구분하는 일종의 무리짓기가 극단화한 경우”라며 “난민 문제의 경우, 치안 문제 등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 안전에 관한 본능이 극도로 활성화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아 고통과 욕설을 이어가는 이유는 카타르시스 때문”이라며 “개인적·집단적 스트레스 해소의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 난민법 폐지 청원 60만명 빗발 사회에 기여할 자산 될수 있어 인력부족 업종 취업 허가키로

독교(8.2%), 천주교(2.4%) 순으로, 이슬람교는 상위 5개 종교에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을 내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에 비해 그 변동폭이 큰 편”이라면서도 “2012년 이후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희생양 찾기 대신 갈등 해소 지혜 모아야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대사회와 달리 원로들의 중재자 역할이 무너진 오늘날은 외교, 사법제도 등 사회적 시스템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엮인 정치인의 표 계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게 배틀구를 만드는, 즉 자연스레 물꼬를 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